

## 2. 정책 동향

### □ 정책 이슈 : 경기 논쟁

- (내용) 최근의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99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 있어서 정책 당국간에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음
  - 재정경제부는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,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
- (재정경제부)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, 금리의 추가 인하 등 내수 진작 정책을 유지해야 함
  - 98년 9월 이후의 산업생산 동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, 소비심리 역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  - 99년에도 실업문제의 악화, 수출 둔화 등 경제에 나쁜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
  - 따라서 금리 인하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수 진작에 더욱 주력하여야 하며,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하는 경기부양책의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음
- (한국은행) 경기는 이미 저점을 통과하였으며, 따라서 금리 하락 및 통화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
  - 98년 9월 이후 민간소비, 도소매 판매, 설비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, 경기가 상승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됨
  -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특히 주식 시장 등에 있어서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,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 지속, 수출 증대, 외환시장 안정 등 점진적인 경제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

#### <경기 논쟁의 주요 내용>

		재정경제부	한국은행
99년	실질GDP성장률	2.0%	3.2%
경제 전망	경상수지 흑자	200억 달러	210억 달러
	소비자 물가	3.0%	3.1%
최근 상황 판단		경기 저점 통과 불투명, 침체 지속	경기 저점 통과, 회복세 반전
정책 방향		추가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 유지	금리 인하 및 통화 확대에 신중

## 주간 경제 동향

### □ 정부 정책 동향 (1. 11~1. 17)

<b>한국은행(1.11):</b> 원화 가치 안정 적극 개입	- 금융기관 및 공기업이 유치하는 달러화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화 가치의 안정에 개입 -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10억 달러를 매입할 방침
<b>재정경제부(1.12):</b> 실물경제 회복에 정책 초점	- 주식시장 활황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의 호기로 보고, 유상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를 적극 추진할 방침 -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, 설비 투자 확대를 경기 회복을 유도
<b>정보통신부(1.13):</b> 정보화촉진기금 확대 지원	- 98년보다 23% 증가한 6,350억 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3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정보통신 업체에 지원 - 금리는 연 6.5%이며, 중소기업은 6%의 우대 금리 적용
<b>청와대 경제 수석(1.14):</b> 99년 경제정책 우선 순위 제시	- 정책 우선 순위는 금융 및 대기업 구조조정 완료,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, 경제성장 회복과 실업 축소, 신노사문화 정착, 지식산업 기반 확충의 순서임 - 구체적으로는 구조 개혁, 내수 진작, 금리 하락, 고용 증대 등에 정책의 비중을 둠
<b>금융감독위원장(1.14):</b> 서울은행 이번 주내 매각	-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유럽계 은행에 서울은행을 매각 - 또한 철강, 정보통신 등 중복 투자가 심한 산업에 대한 추가 대규모 사업 교환(빅딜)의 필요성 강조
<b>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(1.14):</b> 전자화폐제도 2000년 실시	- 10월을 전후해 인구 밀집의 1개 상거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, 2000년 중으로 본격적 실시 - 최고 충전 한도는 10만 원이며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카드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
<b>한·일 재무장관(1.15):</b>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합의	- 일본이 98년 발표한 '미야자와 플랜'의 일환으로, 외환 위기 발생시 최대 50억 달러의 지원이 가능 - 이 자금은 가용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아닌 무역금융,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이 제한되며, 지급 이자는 IMF 차입금 수준인 7~8%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
<b>재정경제부(1.15):</b> 뮤추얼펀드 비과세	- '조세특례제한법'을 개정하여, 경쟁 상품인 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 - 우선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
<b>실업대책위원회(1.16):</b> 1/4분기중 공공근로 사업 확대 시행	-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당초 29만 명에서 35만 2,000명으로 확대하여 투입할 방침 -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